

특별기고



김석환

광주스포츠과학연구원장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제값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체육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힘이 있다. 열린 공간에서 함께 땀 흘리고 어울리다 보면 서로의 본 모습을 보게 된다. 삶은 혼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민선 8기 '강기정 호'와 직선 4기 '이정선 호'가 힘찬 출발을 알렸다. 기대도 크다. '체육의 쓸모'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체육 정책, 융합이 중요하다

정책 수립의 3대 요인은 방향성, 타이밍, 실현 가능성이다. 정책 완결의 3대 요인은 정합성, 수용성, 실행력을 말한다. '방향성'으로 시작해서 '실행력'으로 끝나는 긴 여정이 정책의 시작이다. 이와여대 석좌교수 최재전 교수는 "깊게 파려면 넓게 파라"고 말했다. 새겨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정과 교육청, 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정책개발과 융합이 필수다.

첫째, 민선 8기 '강기정 호'의 체육 정책으로는 영산강 익사이팅 벨트 조성이 대표적이

'체육의 쓸모'에 대하여

다. 활력 분야로 분류된 복합쇼핑몰에도 문화와 관광, 예술과 체육이 융합된 체험 공간이 들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스포츠 마이스 사업의 구체적 전략이 수립돼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스포츠 산업의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지역특화형 미래 산업육성 기반 구축에도 우월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 광주는 2002 FIFA 월드컵대회, 2015년 유니버시아드대회,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2022년 세계양궁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이 있지만 아직까지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도시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넘버원(Number one) 전략이 아닌 오온리 원(Only one) 전략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직선 4기 '이정선 호'는 3대 목표로 '더 앞선 교육, 더 넓은 교육, 더 깊은 교육'을 제시했다. 학교 체육 분야로는 '광주 학생 스포츠 종합센터'를 통해 평생 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체육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은 학교 체육 시간이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은 주장하면서 일반 학생의 '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기부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뉴스포츠 및 방과 후 활동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학생 선수에 대한 정책은 시정과 체육회와의 별도 TF팀을 꾸려 창의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

셋째, 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정책이다. 민선 2

대 체육회는 위드 코로나의 아픔을 딛고 한 단계 도약하고 있다. 제51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역대 최다 금메달을 획득했고, 광주양궁월드컵대회 때는 'K-스포츠과학 컨디셔닝지원'을 통해 대회 성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지난 7월 초에는 직선운동경기부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고 국비를 확보했으며 최근 의료협력위원회, 민간협력위원회,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유치지원위원회를 신설해 비상을 도모하고 있다. 기존 스포츠과학연구소는 '스포츠과학연구원'으로 확대 재편해 광주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혁신사업을 추진한다. 스포츠는 물과 공정성이라는 제도를 통해 확대 발전했다. 종목단체에서도 확장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기획, 마케팅 능력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정책 실행력으로 거듭나야

'독목불림'. 나무 한 그루로는 숲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모든 노력의 융합은 체육 정책에 대한 실행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어떤 정책도 한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성공할 수도 없다. 효암학원 이사장이셨던 채현국 선생님은 "세상에 정답은 없다. 무수한 해답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체육의 쓸모'에 대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무수한 해답'을 모아야 할 때다. 체육을 '추앙'하지 않아도 좋으니 시도조차 하지 않는 누는 범하지 않길 바란다. 권위는 희생에서 나온다. 미션을 통해 완성을 꿈꾸는 정책들이 실행되길 기대해 본다.

탄소중립 성공의 열쇠, 바다에 있다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UNEP(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들의 조사에 따르면, 바다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의 70%를 블루카본이 저장하고 있으며, 탄소의 흡수 속도도 육지 생태계보다 최대 50배가 빠르다.

2019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맹그로브, 염습지, 잘피숲 등 총 3가지의 블루카본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정했고, 71개 국가가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블루카본을 포함시키고 있다.

블루카본 중 맹그로브를 제외한 염습지와 잘피숲은 우리나라도 보유하고 있다. 염습지는 순천만과 같이 칠면조 등의 염생식물이 서식하는 갯벌을 말하며, 전체 갯벌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염습지의 탄소흡수량은 일반갯벌보다 최대 5배가 높으면서 탄소 1톤을 흡수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산림의 20%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보성군과 신안군 등의 갯벌을 염습지로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5년부터 갯벌의 대부분을 염습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다른 블루카본인 잘피는 해초류로 연간 탄소흡수량은 1ha 당 약 300~500톤으로 알려졌다. 탄소를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한국수산자원공단은 60억원을 투입해 여수 서도리 160ha, 여수 유송리 159ha, 완도 정계리 160ha 등 955ha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잘피의 1ha 당 조성비용은 약 600만 원이며, 연간 탄소흡수량은 열대우림(800톤/ha)의 절반에 육박한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산림보다 뛰어난 염습지와 잘피 모두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양자원이다.

세계 5대 갯벌에 꼽힐 만큼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갯벌의 전체면적은 2,482km이

며 이중 42%에 해당하는 1,053.7km의 갯벌이 전남에 위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갯벌의 탄소 흡수와 저장을 규명하는 연구를 시작했고, 5년에 걸친 연구 끝에 갯벌이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연간 26만 톤의 탄소를 흡수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블루카본으로서 갯벌 가치를 세계 최초로 규명한 정부는 갯벌의 블루카본 인증을 위한 추가 연구와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조류와 패각 등 블루카본 후보군 발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바다는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탄소의 30%를 흡수·저장해 기후변화를 늦추고 있다. 그럼에도 바다의 탄소흡수량은 아직 한계에 달하지 않았고 인간의 노력에 따라 탄소흡수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의 중심에 블루카본이 있다. 블루카본은 육상식물보다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나고 조성비용은 매우 낮은 탄소중립 분야의 블루칩이다.

염습지, 잘피숲, 갯벌, 해조류, 패각 등 인증된 블루카본부터 후보군까지 다양한 블루칩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이 '대한민국 해양 수도' 전남이다.

전남도는 정부와 함께 블루카본을 국가 인벤토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산정에 대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국제적 인증을 받기 위해 국제연대도 모색해야 한다.

전남의 블루카본이 흡수한 탄소는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될 것이며, 이렇게 발생한 수익은 바다를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과 바다의 상생이 실현될 것이다.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으로 탄소중립을 성공하겠다는 전남도의 강력한 의지가 블루카본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시설

국민의힘, 지역 예산지원 보따리 풀길

광주시와 전남도 등은 18일 시청에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 국민의힘도 권역별 예산협의회를 광주에서 먼저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임하는 상황으로서 어느 때보다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예상된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광주·전남 현안을 청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무엇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광주 민심을 공략한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해 심도 있고 구체적인 이행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최근 현대백화점그룹의 복합쇼핑몰 건립 참여 선언으로 공식화한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해 광주시의 입장 및 계획안을 청취하며 당차원의 지원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후보 시절 송정시장에서 광주에 없는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고 이후 광주시도 이 같은 흐름을 타며 지역사업보

다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광주시당도 복합쇼핑몰 유치 노력을 환영한다며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행정 당국과 정부·여당의 지원 협력이 이뤄진다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는 특히 27년 만에 시의회에 진출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용남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일당 독점의 폐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정에서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여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다면 지역 발전 전략은 보다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될 것이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일찍이 서진정책을 펼치운 만큼 이번 복합쇼핑몰 유치를 비롯해 미래 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에 전향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또 지역 현안인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 주도의 입장을 천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면 광주·전남이 국민의힘 불모지만은 아님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공유 전동 킵보드 전반적 점검 시급하다

전동 킵보드가 교통 사각지대를 없애고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마이크로 모빌리티'로서 인기를 얻고 있다. 집 근처에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이동할 때 전동킵보드는 더할 나위 없는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인도나 도로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 킵보드가 도심 골치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

전동 킵보드는 관련 법상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로 분류된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갖춘 운전면허 소지자가 차도에서만 시속 25km 이하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면허 취득 대상이 아닌 만 16세 이하 청소년은 아예 탈 수도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 공유 서비스 현장 말고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달리는 모습은 마치 곡예를 방불케 한다. 실제 최근 광산구 신가동의 한 도로에는 공유 킵보드 4대가 차도 중앙분리대 근처에 불법 주정차 위험하게 나뒹굴고 있었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간(2019~2022년 5월)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전동킵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총 140건이 발생했다.연도별로는 2019년 21건, 2020년 100건의 사고가 발생해 1년 사이에 무려 5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5월까지 2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전동 킵보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자치구별로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된 공유 킵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각 지자체는 견인대행업체를 선정하지 않아 조례는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지자체별로 기준과 운영 정책이 달라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이용자들도 헷갈릴 뿐이다. 어차피 공유서비스를 시작한 이상, 광주시와 관련 지자체는 사용자 안전관리와 면허제도, 사고 시 보험 문제, 도로환경 개선 등 전반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

오라가락하는 규제 아래 시장 성장은 어렵다. 그러는 사이 이용자는 불편해지고, 공유 킵보드는 도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다.

구례 지역아동센터 엄벌 목소리

기지수첩



권동현

제2사회부 차장

구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철저한 수사과 구례 사회모든 구성원의 진정 어린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구례의 한 지역아동센터가 지속적인 아동학대 유행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체벌과 욕설, 가족사료용 간식, 교사의 성추행 목인, 불법적 후원금 모집 등에 대한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용기를 낸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이사장은 실태를 알린 제보자를 오히려 소시오패스라고 호도하고 있다. 고발로 인해 센터가 문을 닫게 됐다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의 불만을 제보자의 탓으로 조

장하고 있다.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쌓아 온 인맥과 힘을 이용해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보자를 고립시키는 양상이다.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체벌을 훈육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성추행을 애정이 결핍된 학생들이 원인을 제공한 일탈행위로 말하는 이사장의 궤변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일부 주민과 학부모도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데 한몫하고 있다.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망각한 채 지금까지의 친분과 지금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이유로 제보자를 매도하기도 한다.

구례군은 우선 1개월 사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사결과에 따라 시설폐쇄 조치까지 고려한다고 하나 언제 나올지 모르는 수사·재판 결과를 운운하는 것을 보면 강력한 처벌의 지가 의심스럽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온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고통이 따를지라도 부패한 것은 도려내야 한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 고품은 어설픈게 짜내면 몇 번이고 재발한다. 뿌리까지 뽑아내서 깨끗이 소독까지 해야 재발하지 않는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 details.

Advertisement for Jeonnam Daily newspaper, featuring the logo and slogan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